

의 정 정 보

2005 - 6 3. 31

목 차

I. 중앙기관 정보	1
II. 타 사·도 의회동향	7
III. 새 법령 소식	9
① 새로 제·개정된 법령(2건)	9
② 입법 예고중인 법률안(3건)	10
부 록 : 행복한 책 읽기	11

I. 中央機關 情報

① 충남 홍성군 등 10개 자치단체 ‘총액 인건비제’ 시범 실시

-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없이 자율적으로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공무원 정원을 책정할 수 있는 제도인 ‘총액 인건비제’를 충남 홍성군 등 1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.
-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 기구·정원에 관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각종 승인권 및 법령상 기준이 폐지됨으로써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공무원 정원을 책정할 수 있어 지방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예를 들어 A자치단체의 전체 인건비가 10억원이라면 이 총액한도 내에서 기구과 인력을 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갖고 조정할 수 있게 된다.
- 기구와 인력의 변동사항은 조례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예산을 승인하는 지방의회 통제를 받아야 한다. 통제의 주체가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의회로 바뀌는 셈이다.
- 총액인건비제는 2007년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이나 사전에 제도를 점검·보완할 수 있도록 2005년(1단계), 2006년(2단계) 2년간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할 계획이다.
- 이번 1단계 시범 실시되는 지역은 광역자치단체 2개(경상북도, 제주도), 기초자치단체 6개(부천시, 김포시, 정읍시, 창원시, 홍성군, 장성군), 자치구 2개(서울 강남구, 광주 광산구) 등 총 10개 자치단체이다.

② 행정자치부 ‘본부-팀제’ 조직개편 및 서열 파괴인사 단행

-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료조직인 행정자치부가 고객중심, 성과와 효율, 평가와 책임을 중시하는 혁신조직으로서의 개편을 위하여 지난 48년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‘실-국-과 체제’를 폐지하고 ‘본부 - 팀제’를 전면 도입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.
- 기존의 부서장, 국장, 과장, 계장 등 수직형 조직을 본부장과 팀장이라는 수평적이고 단순화된 조직으로 개편, 새출발하면서 기구나 인력의 증원없이 재편했다.
- 이에 따라 기존 1차관보, 1실, 1본부, 7국, 4관, 1센타, 45과, 4팀 등 총64개 조직에서 → 5본부, 8관, 1단, 1아카데미, 48팀 등 총 63개 조직으로 개편되었다.
- 행자부는 조직개편에 이어 인사를 단행하였는데, 53개 팀장에 대하여 부내직원들의 직위공모 신청을 받아 본부장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3회에 걸친 심사를 통해
 - 기존 연공서열 중심의 보직관리 인사시스템을 탈피하여 능력과 실적, 전문성과 개혁성을 중심으로 우수한 인력을 전격 발탁하여 핵심직위를 부여하는 등 기존 국·과장의 45%를 교체하는 팀제 인사를 단행하였다.
- ※ 총 63개 직위 중 개방형직위를 제외한 60개 직위 보직인사 실시, 60명중 신설직위를 포함한 27명(45%)을 신규·교체 임용

③ 행자부, ‘조세지출예산제도’ 도입 추진

- 행정자치부는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통제하고,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“조세지출예산제도”를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하기로 했다.
- 조세지출예산제이란 세금감면과 같은 조세지원의 내용과 규모를 예산형식으로 표현하여 의회의 통제를 받게 하는 제도로 미국,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다.
-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지방세 감면 내역을 예산 형식으로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되고, 지방의회는 조세지출예산을 참고하여 예산편성을 하게 된다.
- 지방세지출예산제도가 도입되면 정책별·기능별로 지방세 지원내역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재정지원과의 중복지원을 막고, 의회에서 지방세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지방세 감면이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행자부는 금년도에 지방세 감면의 기능별 분류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준비를 완료하고, 2006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실시를 거쳐 2007년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.

④ 행자부, 지방자치단체에 ‘프로그램 예산제도’ 도입 본격추진

- 행자부에서는 지자체의 예산서를 누구나 알기 쉬울 뿐 아니라, 투입보다 결과를 강조하는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개편할 계획이다.
- 현행 예산체계는 예산과목의 중심인 ‘목’별 분류를 기초로, 예산 집행의 통제목적에 치중하는 「품목별예산제도」를 사용하고 있다.
- 이러한 방식은 실제 예산집행의 근거가 되는 단위사업들이 목을 달리하면서 산재하여, 특정사업 전체에 대한 투입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암호처럼 각각의 목에 산재하고 있는 관련사업 내용을 일일이 종합해야 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웠다.
- 앞으로 예산편성·집행의 과정을 사업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들의 묶음인 ‘프로그램(사업)’ 중심으로 구조화하고, 이러한 프로그램을 책임구조가 명확한 자치단체의 ‘조직’중심으로 구조화할 계획이다
- 이렇게 되면 자치단체가 하나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투입되는 사업의 전체비용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낼 수 있게 되어 주민이나 지방의원 등 이해관계자들이 당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근거를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뿐 아니라
 - 투입과 산출·성과의 연계가 명확해져, 자치단체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측정의 기준으로 사용되게 된다.
- 금년에 9개 지자체(광역단체 4곳 - 대전·광주·경기·강원, 기초단체 5곳 - 대전서구·광주동구·부천·속초·평창)에서 시범 실시되며
 - '08년 예산편성시부터는 250개 전 자치단체가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예산을 편성,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.

【참고자료】

< 「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」 전 · 후 비교 모습 >

도 입 전(단위 : 천원)			도 입 후(단위 : 천원)		
장·관·항 세항	예산액	산 출 기 초	조직·프로그램·단위 사업	예산액	산 출 기 초
2000 사회개발비	5,557,412		문화관광국	5,557,412	
2110 문화예술	5,557,412		체험문화예술기반구축	2,334,556	
2111 문화예술관리	5,557,412				
100 경상예산	2,433,664		향토사료관운영	30,460	101-04 사무보조인건비= 12,048
110 인건비	198,339				201-01 향토사료관운영영물품 2,400
101 인건비	198,339				200,000 원12 월 2,400
	84,226	02 수당			향토사료관소개책자 6,000
		시간외근무수당(일반직) 6,483원*21인*38시간*12월*1.005= 65,496			3,000 원2,000 부 6,000
	114,111	04 일용인부임			향토사료관유물보존 5,000
		우암사적공원 청소인부 향토사료관 사무보조 12,048			5,000,000 원1 삭 5,000
					향토사료관 학술학회가입비 270
					90,000 원3 개학화 270
					향토사료관 대형난로 542
					516 원10 105 원 542
					202-01 향토사료관 자료수집 및 학회참석 1,200
					40,000 원2 안3 알5 화 1,200
					405-01 향토사료관 유물격납서가 3,000
					150,000 원20 개 3,000
120 경상적경비	2,235,325		고대지역문화체험		
201 일반운영비	209,611				
	209,611	01 일반운영비			
		<일반수용비>			
		시문화상 시상 2,400			
		향토사료관운영영물품 200,000 원12 월 2,400			
		향토사료관소개책자 3,000 원2,000 부 6,000			
		향토사료관유물보존 5,000,000 원1 삭 5,000			
		향토사료관 학술학회가입비 270			
		90,000 원3 개학화 270			
		<연료비>			
		향토사료관 대형난로 542			
		516 원10 105 원 542			
		<관서운영비>			
		일반수용비및급량비등= 34,436			
202 여비	24,038		레저관광산업육성		
	24,038	01 국내여비			
		문화예술자료수집 40,000 원5 안3 알9 화 5,400			
		향토사료관 자료수집 및 학회참석 1,200			
		40,000 원2 안3 알5 화 1,200			
		부서운영국내여비= 9,240			
220 자체사업					
405 자산취득비	3,351				
	3,351	01 자산및물품취득비			
		디지털카메라 부대장비= 351			
		렌즈후드 45,000 원1개= 45			
		향토사료관 유물격납서가 150,000 원20 개 3,000			

⑤ 정부, ‘복수차관제 도입 등’ 정부조직법 개정안 마련

- 정부는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처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, 국방부에 방위사업청을 신설하며, 통계청과 기상청을 차관급 청으로 격상하고, 건설교통부의 명칭을 “국토교통부”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.
- 복수차관제는 재정경제부·외교통상부·행정자치부·산업자원부 등 4개 부처에 도입하여 장·차관의 업무부담 과중을 해소하여 정책품질 향상이 기대된다.
- 지식정보화사회의 진전 및 기상재해의 대규모화 등에 따라 통계·기상업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,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통계청과 기상청을 차관급 ‘청’으로 격상한다.
- 현재 중앙행정기관인 16개 청 단위 기관 중 통계청·기상청·해양경찰청 등 3개 청만 1급 기관이며, 기타 13개 기관은 차관급 ‘청’으로 운영되고 있다.
- 통계청·기상청의 차관급 ‘청’ 격상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외에도 이미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.
- 건설교통부의 중심기능이 도시·도로 및 주택의 건설기능에서 국토종합계획 수립·조정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『국토교통부』로 명칭을 변경한다.

Ⅱ. 他 市·道 議會動向

① 경기도의회, ‘행정도시’ 찬성

- 손학규 경기지사가 행정도시 건설을 동의하고 나선 가운데 경기도의회도 사실상 찬성의사를 표명, 관심을 끌고 있다.
- 지난 3월 25일 경기도의회는 제20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해문(과천) 의원 등 12명이 제출한 ‘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반대 결의안’을 부결시켰다.
- 이날 표결에서 출석의원 79명중 찬성 37표, 반대 41표, 무효 1표로 반대표가 많아 특별법 반대결의안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.
- 또한, 이에 앞서 경기도의회는 ‘행정수도 이전 반대특별위원회 폐지안’도 논란끝에 기립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.
- 경기도의회 일각에서는 그동안 과천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부 의원들이 행정수도 이전은 물론 그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‘행정수도 이전 반대특별위원회’가 결성돼 특별법 반대결의안을 내놓고 행정도시건설에 찬성한 손학규 지사, 유형욱 의장 등을 비난해 왔었다.
- 이와 같이 경기도민들 사이에서도 찬성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등 행정도시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가는 상황이다.

② 부산시, ‘기업인 예우 조례안’ 마련

- 부산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기업하기 좋은도시를 만들기 위해 ‘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’을 마련하고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.
- 이 조례안은 기업인을 예우한다는 선언적인 규정과 함께 △모범 기업인에 대해서는 3년간 운전자금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 △부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 확대 △해외시장 개척단 및 전시회 참가대상 우선선정 등의 구체적인 예우방법이 포함돼 있다.
- 또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시와 기업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‘기업활동촉진위원회’를 설치하고, 기업의 고충을 발굴해 처리해 주는 ‘기업옴부즈맨’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.

③ 서울시의회, ‘지방의회 알기쉽게 만화결집인 홍보책자’ 발간

- 서울시의회는 ‘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의회’라는 제목의 홍보책자를 5,000부를 제작, 배포했다.
- 이 홍보책자는 4색컬러 만화로 꾸며져 누구나 흥미롭게 의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, ‘의회소개’란에는 서울시의회 연혁과 시설현황, 기구와 위원회별 소관사항 등을 소개하고 ‘의회의 기능과 역할’란에는 의안처리, 행정사무감사, 시민참여제도, 청소년 의회교실, 주요 의정활동 등을 소개하고 있다.
- 어린이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조례제정, 행정사무감사, 청원제도 등이 자세하면서도 재미난 만화로 엮어져 지방의회를 이해하는데 요긴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Ⅲ. 새 法令 소식

① 새로 制·改正된 法令 - 2 件

①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 (시행 '05.3.24)

- 가정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하여 여성부에 가족정책의 수립·조정기능을 추가하여 여성부를 → 「여성가족부」로 개편
-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관련기능을 신설되는 청소년위원회로 이관하여 청소년 육성정책과 보호정책을 통합

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(시행 '05.3.18)

-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동절기 근무시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통일성을 기하려고 규정함
- 지방공무원의 평일 근무시간을 원칙적으로 9시부터 18시 까지로 하고,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 까지로 하며,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함
-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함

※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

▶ 지방의회의원,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

② 立法 豫告中인 法律(案) - 3 件

① 지방공무원 임용령중 개정령(안)

- 지자체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중 여성위원을 1인 이상 참여토록 하고, 공무원인 위원의 자격요건을 과장급이상으로 하며,
- 위촉위원은 지방의회, 공무원노조 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각 1인이상 추천토록 함

②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(안)

- 독립유공자에 대하여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수 있는 면제 대상차량의 기준을 비영업용 차량인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2 인승이하 승합자동차,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로 정함

③ 주민등록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(안)

- 금융기관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주민등록 열람 및 초본 교부 신청시 신청대상자가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 인감증명서 제시와 사용인감계 첨부를 의무화
- 주민등록표의 열람대상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도 열람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, 열람범위를 등·초본의 기재사항에 한하도록 하며, 또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·초본 교부신청시 동일한 자의 범위에 동일법인을 포함
-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초본 교부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 주소란에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'를 생략 교부